■제주지역 버스 환승 현황조사 결과

제주 대중교통 개편 후 환승시간 더 길어져

13.7분으로 개편 이전 11.2분보다 늘어나
평균보다 5분 이상 차이… 전국서 세 번째
적합 0곳이던 최소 서비스는 크게 개선돼

제주지역 버스 환승(이용객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것)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보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평일에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이 환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13.7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17.5분), 전남(14.2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긴 소요시간이다. 전국 평균(7.8분)과 비교하면 5분 이상 차이가 난다.

버스 환승 소요시간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가 더 길어졌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인 2017년 환승 소요시간이 평균 11.2분이었는데, 2019년엔 13.3분, 2020년 14.3분, 지난해 13.7분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운행 횟수 등을 조사하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버스정류장 영향권(400m)에 놓인 도로가 전체 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특정 노선이 시간당 2회 이상 운행하는 등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한 '확보 지역'으로 평가된다.

평가 결과 도내 62개 법정동 중 '확보 지역'은 42곳이었고,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취약지역은 12곳, 둘 다 충족하지 못한 사각지대 1곳이었다. 지난 2019년 확보 지역 0곳, 취약지역 41곳, 사각지역 21곳에 비하면 진전된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개됐다. 2020년 기준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63만t이었는데, 이 가운데 제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59만3000t으로 서울 54만2000t을 제치고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018년 913억8600만원, 2019년 910억6300만원, 2020년 977억6500만원, 2021년 1039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겼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코로나19 확산 주춤… 백신접종은 '답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1954명으로 늘었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1721명이며, 위중증 확진자는 없다.

도내 확진자는 지난 15일 350명으로 줄어든 이후 200~3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상태다. 지난 20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337명이 확진되면서 총 확진자는 2356명이며 전주대비 801명이 줄었다.

하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70대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원 치료 중 20일 사망하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는 216명으로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3차 접종률 65.1%, 4차 접종률은 13.8%에 머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바이러스 확정검사를 19일부터 수행중이다.

이태윤기자

음주운전차 경운기 들이받으며 부부 참변

음주운전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9)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B(74) 씨가 숨졌고 경운기에 타고 있던 C(70)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와 C 씨는 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A 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기자

도로 작업자 덮치고 추락

교통 안내하던 20대 사망
화물차 운전자 부상·이송

평화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터지며 갓길에 있던 도로 작업자를 덮치고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 제3고성교 인근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화물차량이 도로 공사를 위해 교통 안내를 하던 20대 작업자 B 씨를 덮치고 평화로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화물차 운전자 A 씨도 찰과상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주행 중이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바퀴가 터져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과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함께해요, 치매 극복!"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서 21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대에서 "함께해요,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 38건 발생

부주의·수영 미숙 사고 많아… 안전의식 과제

올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총 38건의 연안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2022년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관리 지원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연안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 연안에서는 38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에 19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7월은 8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 8월에는 11건의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 연안사고는 4건 늘었지만 사망자는 1명 감소한 수치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표류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레저 34%, 기타 11%, 추락 8%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미숙 8%, 기상불량과 음주가 각각 5% 등이었다.

제주해경은 올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상 순찰대·수상오토바이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했으며 연안안전지킴이 160명을 주요 위험구역 36곳에 배치해 계도활동과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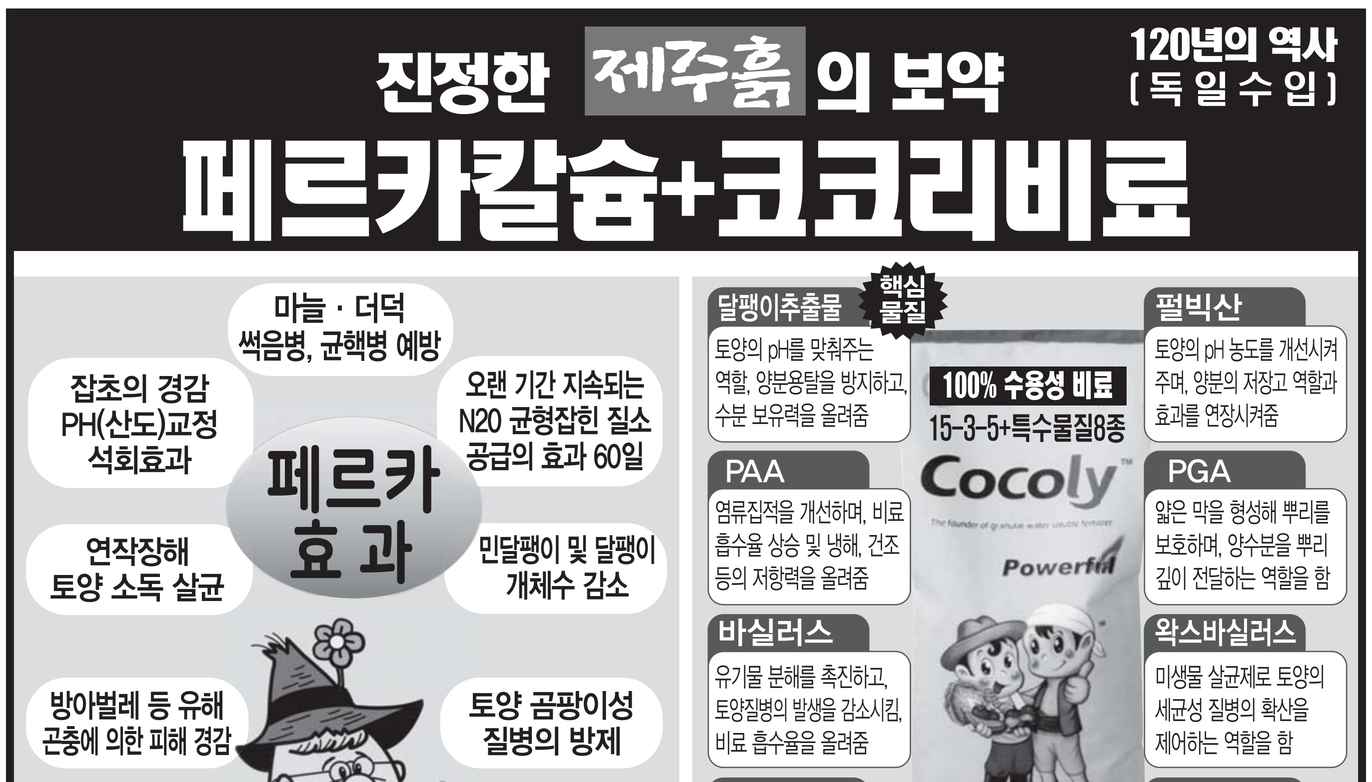
"주민대표 참여 없는 환경영향평가 무효"

참여환경연대, 오등봉 민간특례 절차적 하자 주장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있어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할 수 있어 주민 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협의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도지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 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권한을 위임했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도영기자